

데스크시각



윤영기  
체육부장

광주체육회장 출연금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김창준 광주시체육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애초 약속한 대로 임기 3년 동안 2억 원씩, 출연금 6억 원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불같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잔 불 정리 단계에서 다시 불길이 번지는 모양새다. 특히 지역 대학 체육학과 교수들과 학교 체육관계자 등이 '광주체육 희망포럼'을 꾸려 칼을 베풀고 있다. 전 광주시체육회 상임부회장과 사무처장 등도 광주체육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문건을 암암리에 돌리며 세를 불리고 있다.

이런 역풍에 대해 김 회장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엘리트 체육인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정치 공세 혹은 김 회장을 흔드는 뒷배 세력이 있다는 프레임으로 덮으려 한다. '한 자리 얻지 못하자 앙심을 품었다'거나 '관선 시절 행사하던 이들이 뒷방으로 밀려나자 세를 모으고 있다'는 설도 마찬가지로 있다. 하지만 그렇게 물을 타

민선체육회 그들만 민심을 몰랐다

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취임 5개월 만에 반(反)김창준 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출연금 논란'의 본질은 체육회를 장악하고 있는 회장과 측근들의 낡은 리더십이다. 여기에 '우리끼리 결정하면 그만이지'라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선 체육회장 시대를 맞아 진즉 갈아야 할 불판을 그대로 고수한 대가는 의외로 가혹했다. 갓 출범한 김 회장 체제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이들이 늘고 있다.

출연금 논란 급한 불은 꺾지만

매년 회장이 2억 원씩을 출연금으로 내야 한다는 체육회 사무규정은 재검토할 만한 명분이 다분한 사안이었다. 우선 회장 출마자들의 공무 담임권과 피선거권을 제약하는 독소 조항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 회장이 꾸민 스포츠 공경위가 매년 2억 원씩 내게 돼 있는 회장 출연금 규정을 2억 원 이상 출연해야 한다고 개정할 것까지는 크게 틀리지 않았다. 문제는 이 규정이 곧바로 김 회장에 적용돼 특별로 변질됐다는 데 있다. 김 회장이 수혜자가 되는 순간, 스포츠공경위의 '공경'은 소멸됐다. 결과적으로 스포츠공경위원회는 김 회장이 내야 할 출연금을 삭감해 주는 모양새가 됐다.

예민한 돈 문제와 엮이면서 김 회장의 처지도 남부하게 됐다. 그가 첫 임기에 내야 할 2억 원의 납부를 4개월 동안 끝내지 못한 결정이 나왔으니, 진의를 의심받을 것도 당연했다. '셀프 감액'이니 '꼼수'니 하는 지적도 과하다고 할 수 없는 형편이다. 따지고 보면 이 문제의 해법은 의외로 간단했다. 김 회장이 '시민과 약속이 나는 임기 동안 6억 원을 내겠다. 후임부터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자'고 한마디만 했어도 정리될 사안이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실기했다. 뒤늦게 출연금 2억 원을 납부해 '신용'은 어느 정도 회복했으나 '신뢰'까지 회복할 길은 요원해 보인다. 신뢰의 상실은 두고두고 김 회장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

광주 체육인들은 출연금 논란에서 김창준호의 '집단지사'를 봤다. 체육회 상임위와 스포츠 공경위원회는 김창준 회장이 멤버를 꾸린 핵심 의사 결정 기구다. 출연금 개정 과정에서 이들 중 단 한 명도 현 회장부터 적용되는 출연금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첫 민선 체육회장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민심은 의심했다. 그러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인데도 말이다. 이리니 김 회장에게 쓴소리 하는 진짜 측근이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개정된 규정, 그와 관련되지 않은 체육인들의 생각과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는 사실을 왜 몰랐을까. 더 안타까운 것은 김창준 집행부에 대한 체육인들이 신뢰가 있었다면 문제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이란 점이다.

집단지 무사유가 빛은 자충수

김 회장 체제는 선거 득표수가 말해 주듯 취약한 지지 기반에서 출발했다. 김 회장은 지난 1월 체육회장 선거에서 147표를 받아 상대인 전갑수 후보를 10표 차로 누르고 가까스로 당선됐다. 김 회장이 체육계의 전폭적 지지를 얻지 못한 자신의 한계를 최소한이라도 의식했더라면 이처럼 출연금 자충수를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김 회장에게 표를 주지 않았던 인사들은 '거 봐라. 다 이유가 있다'며 확증편향을 굳혀 가고 있다.

회장에 취임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온갖 비난을 퍼붓느냐고 탓할 일이 아니다. 이번엔 문제가 된 것은 민심을 의면한 잘못된 결정이다. 체육계는 이미(民)이 주인인 시대를 맞이했다. 따라서 앞으로 광주체육회의 결정과 정책에 대해 이보다 더한 비판과 비난이 쏟아질 수도 있다. 관선 시대처럼 '주는 대로 받고' '하라는 대로 하던' 체육인들이 아니다. 김창준 집행부는 이제 시대정신이 바뀌었다는 사실부터 깨달아야 할 것이다. /penfoot@kwangju.co.kr

은편칼럼



임명재  
약사

우리 문화에는 '화'라는 독특한 질한이 있다. '화병'이라는 단어는 요즘 말로는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다. '울화병'이라고도 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한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쌓인 화를 삭이지 못해 생긴 몸과 마음의 질병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주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듯하며, 뽀뽀나가고 싶고 뜨거운 물이나 뉘에서 치밀어 올라오는 증세와 불안, 절망, 우울, 분노가 함께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심리학 용어 사전에도 화병은 울화병의 준말이며 울화란 화가 쌓여 우울해진(답답해진) 상태를 의미한다.

직업의 특성상 이러한 심리적 상태를 가진 사람들은 많이 접하게 된다.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가족에 의해서, 직장에서 그리고 부부간의 관계에서 많이 보

화를 다스리는 법

인다. 화병은 인간관계를 쉽게 절연할 수 없는 관계에서 더 깊게 발생하는 것 같다.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를 쉽게 단절시키고 그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되면 좀 더 쉽게 가라앉거나 잊히는 반면에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지속해야 할 관계에서 화병은 깊어지고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

화병은 각종 합병증을 유발시킨다. 불면증이 대표적인 합병증이고, 식욕 부진이나 식탐이 발생하여 체중이 줄거나 늘어난다.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된다. 우울증이 함께 따라온다. 생활에 의욕이 떨어지고 자꾸 현실을 도피하게 된다. 결국 다양한 인간관계가 단절되어 화병을 유발하는 원인을 희석하지 못해 그 화병이 더욱 심각하게 도드라지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

화병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첫째는 자신의 영역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그 영역에는 아무도 쉽게 들어지 않아야 한다. 이때 영역이라는 것은 마음의 영역이고 행동의 영역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마음의 영역이 마치 놀이터 같다면 어떻게 됐는가. 아무나 손쉽게 그 놀이터에 와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놀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떠나 버린다. 그들이 놀면서 남

긴 흔적들, 예를 들어 쓰레기라든지 그들이 내뿜은 말들이 그 놀이터에 남아서 놀이터의 주인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집안이나 아니면 최소한 자신의 방처럼 자물쇠가 있는 마음의 영역을 갖춘다면 어떻게 될까? 누군가 내뿜는 말이 내 방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복도나 다른 방에서 떠드는 얘기라면, 그 말들의 정도가 내 안에 흔적을 남기기 쉽지 않을 것이다. 행동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쉬고 싶을 때, 어떤 것을 하고 싶을 때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타인에 의해, 타인이 주도하는 행위에 조연으로 참여하는 행위가 많아질수록 내 영역의 울타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울타리가 없거나 출입문의 자물쇠가 없다면 누구라도 쉽게 들고 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안아야 할 스트레스가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내 영역 안에는 누구라도 허락없이 들어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때론 단호하게, 때론 상대에게 미안하더라도 이것을 잘 지켜 내야만 화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둘째는 내 것과 남의 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남의 말도 내 것인 것마냥 내 안에 두거나 남의 행동을 내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정치판에서 여야 야가 대

립을 할 때 서로 끊임없이 자신의 주장을 늘어놓는다. 여는 여의 의견인 것이고 야는 반대의 의견인 뿐이다. 상대 의견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은 상대의 의견으로 그친다. 우리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이다. 시부모의 말씀이나 가족의 의견, 친구의 말 한마디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다. 그 사람의 말과 의견을 분석하려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자. 내가 수용할 수 있는지, 나의 의견과 합치가 가능한지 내 주관대로 판단해서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의 생각인 것으로, 그 사람의 의견일 뿐인 것으로 놔둬야 한다.

셋째, 몰입할 수 있는 취미가 있어야 한다. 반드시 남과 함께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을 때 쉽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좋다. 맘을 흘리는 것을 가장 먼저 추천할 수 있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모가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부부 관계에서도 어느 일방이 주도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주도하게 내버려 두서는 안된다. 나의 영역을 만들어 지켜야 하고 그것을 존중하게 만들어야 한다. 물론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고



김경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

세계적 문화인류학자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총, 균, 쇠'라는 저서를 통해 문명간에 우열이 생긴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세계를 정복했던 문명은 우연하게도 농업과 목축이 발달하기에 좋은 곳에서 시작했고, 이후 풍족한 식량을 바탕으로 앞선 사회 체제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특히, 가족을 키우면서 얻게 된 군에 대한 면역력은 그들이 세계를 정복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말한다. 즉 환경적 차이가 힘의 우열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의 환경 결정론적 관점에는 이견이 있지만 특정한 환경 조건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

미래 농업으로 가는 길, 블루 농수산

까.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문명국의 힘이 과거 우연히 주어진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미래를 주도하기 위한 힘도 현재의 환경 변화를 통해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전남도가 새 천년의 비전으로 추진 중인 '정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에는 그러한 생각과 의지가 담겨있다. 블루 이코노미는 전남의 청정 자연자원과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을 융복합해 세계 속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지닌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가겠다는 프로젝트다. 에너지 신산업, 관광, 바이오, 미래 운송기기, 농수산, 스마트 시티까지 6대 분야로서 올해를 그 원년으로 삼고 환황해권 경제의 중심축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바로 여기에 블루 농수산이 있다. 농업은 인류의 생명 산업으로서 한때 문명 발전에 큰 역할을 했지만 다른 첨단 산업에 밀려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다. 그런 농업이 이제 식량 안보의 중심이자 미래 먹거리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흐름을 타고 블루 농수산은 블루라는 색의 세 가지 의미

지로 비전을 이끌어 가고자 한다.

첫째, 블루는 청정, 깨끗함이다. 이제 사람들은 농업을 생각할 때 생산량과 더불어 청결과 안전에 주목하고 있다. 친환경이 미래 농업의 핵심이 된 것이다. 전남도는 바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 농업을 키우고 있다. 전국 최대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을 바탕으로 생산-가공-유통-수출 및 체험-관광이 융복합된 친환경 농업 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다. 아울러 해양 쓰레기를 말끔하게 치워 청정하다 생태계를 만드는 데도 노력할 것이다.

둘째, 블루는 혁신, 새로움이다. 농촌의 빠른 고령화로 인력 부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전남도는 이로 인한 고용 저효율의 생산 구조를 첨단 기술을 활용해 저비용 고효율로 혁신하려 한다. 우선,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등 무인·자동화가 가능한 첨단농업 기계화 농업생산 시범단지를 구축해 미래 농업의 표준 모델을 정립하고자 한다. 자동화·지능화를 통해 생산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첨단 친환경 양식 수산물 생산

기반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셋째, 블루는 지속, 영원함이다. 농업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래 왔던 인류와 영원히 함께 가야 할 생산 산업이다. 그러한 농업이 기후 변화, 농촌 인구 감소 등으로 흔들리고 있다. 전남도는 신소득 유망 아열대작물 실증센터를 조성하는 등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청년창업농을 조성 등 미래 농업을 이끌어 나갈 인력 육성에 힘써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려 한다.

이렇듯 블루 농수산은 농어업인의 삶의 터전을 가꾸고,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 자연 환경을 깨끗하게 보전하는 등 농어업이 본래적으로 지니고 있는 공익적 가치에 주목하고 이를 확장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 과거의 농업이 결과적으로 문명의 우열을 낳았다면, 블루 농수산은 앞으로 문명의 화합과 상생에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 오랜 시간 뒤에 블루 농수산이 미래 농업에 혁신을 불러오는 좋은 사례로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도록 전남도는 오늘도 달릴 것이다.

社說

'광주형 일자리' 정부 지원 토대 마련됐다

정부의 사회통합형 일자리 모델이 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전국 최초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공식 선정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제 혜택 및 투자 보조금 등 다양한 지원을 받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제 제1차 상생형 지역 일자리 심의위원회를 열어 '광주형 일자리'를 전국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최종 선정했다. 정부가 지난 4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해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선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처음이다. 심의위는 상생 요소와 사업 지속 가능성, 고용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근로자의 실질 소득 증대를 위한 복지 혜택과 인프라 구축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게 된다. 노사 동반성장 지원센터와 거점형 공공어린이집 건립,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인증센터 구축, 빛그린산단 산학융합지구 조성 등 지원 규모는 모두 5185억

원이다. 이 가운데 국비 지원액은 2944억 원에 이른다.

노사민정 대타협을 기반으로 한 광주형 일자리는 기존 완성차 업체 절반 수준에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복리·후생 지원 등을 통해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합작법인 광주글로벌모터스를 설립, 3년간 5754억 원을 투입해 빛그린산업단지 내에 자동차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취업난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 시작됐으나 노동계와 갈등으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맞은 등 우려곡절 끝에 본궤도에 올랐다. 내년까지 908명의 정규직 채용과 협력 업체 등의 간접 고용 효과를 포함하면 1만 2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이제 정부는 각종 지원을 신속하게 진행해 이 사업이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청년 고용 시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파트 분양사기 피해 수사 좀 더 속도내야

광주 동구 지난주택조합 아파트 분양사기 피해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광주 동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주택조합 사기 사건과 관련 지난 주말까지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는 총 87명이나 된다. 지난 9일 27명의 무주택 서민들이 17억 원의 계약금을 뜯겼다고 처음 신고한 이후 11일 53명(40억 원)으로 늘더니 급기야 피해자가 100명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한 것이다. 이들이 추정한 피해 금액도 무려 57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사건 발생 이후 지난 주택조합을 찾아 지정된 계좌로 제대로 계약금 납입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에 피해를 신고하는 주민들이 잇따르면서 앞으로 피해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구 지난동 지난 주택조합 사무실은 피해 여부를 확인하려는 조합원들과 대책을 내놓으라며 조합을 찾아 항의하는 피해자들이 뒤섞이면서 연일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조합 계약서에 적힌 지정 계좌가 아닌, 업무 대행사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땅을 치는 광경도 목격됐다. 이들은 조합이 위탁한 업무 대행사를 믿고 아파트 계약금 등을 납입했다가 피해를 봤다며 조합 측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업무 대행사가 계약금 납입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조합이 꼼꼼히 살펴야 하는 책임을 소홀히 해왔다는 조합원들의 피해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광주 동부경찰은 최근 압수 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전체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업무대행사 대표와 직원 등 3명의 행방을 찾고 있다. 경찰은 분양 사기 피해자들의 경우 내 집 마련을 위해 모아 놓았던 돈을 하루아침에 날려 버린 서민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 수사에 좀 더 속도를 내야 할 것

無等鼓

2012년 2월 8일, 국회 산자위에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논의가 시작됐다. 대기업의 소프트웨어 수주 독식을 막아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였다.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에 '등' 자를 포함시킬 것이냐가 쟁점이 됐다.

정부는 국방·외교·치안·전력(電力) 사업에 '등' 자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지만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그럴 경우 대기업의 수주 독식을 막을 수 없다며 '등' 자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산자위의 이 같은 결정은 법사위에서 뒤집혔다. 한나라당이

법사위원장

제안하자 우윤근 법사위원장이 이를 받아 들여 법안을 수정 결의했고 결국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법사위의 막강한 권한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다. 법사위는 국회 18개 상임위 가운데 가장 힘센 상임위로 꼽힌다. 해당 상임위에서 결정된 법안은 반드시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지구 심사' 권한을 활용해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법사위는 Keith King 역할 때문에 종종 국회 내 상원

으로도 불린다. 법사위원장은 마음만 먹으면 다른 상임위 법안을 수정할 수도 있고 처리 시한을 무한정 연장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늘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했다. 16대까지는 다수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지만 17대부터는 여당을 견제한다는 의미에서 제1야당에 양보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 왔다. 21대 국회 첫 법사위원장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자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보이콧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은 이유로 '일하는 국회'를 내세우고 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취임 첫 일선으로 "사법 개혁과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법사위의 법안 심사 대상인 검정 수사권 조정 등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법사위의 갑질 관행도 뜯어고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양당을 끌어안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다만 발목 잡기와 몽니 부리기라는 법사위의 갑질을 없앤다면 그나마 국회 파행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정필수 제2사회부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牧</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지)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체 육 부 220-062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세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